

농산물 가격안정 '기준가격' 결정

전북도, 가을배추 432.3원/kg · 가을무 450.3원/kg 확정... 생산비의 평균 85.5% 수준

전북도가 올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품목에 대한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기준가격'을 가을배추는 432.2원(1kg 기준), 가을무는 450.3원(1kg 기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11일 열린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서 '기준가격' 결정(확정)방식을 품목당 투입되는 생산비와 유통비, 최근 5개년(최저 제외) 전국 평균을 적용토록 심의·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가격의 경우 작물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비'와 비교

할 경우 평균 85.5%가 높은 가격으로 확정됐다.

민약 시장가격(판매가)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가 지원된다.

이번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한 227농가 116.5ha가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도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

원사업 참여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선 6기 삼락농정의 계급 받는 농업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도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의회,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 발표

전주시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시의회는 15일 '국정판단 자초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성명을 내고 최순실 일당과 함께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캄캄한 절망이 가득하고 분노를 넘어선 뜨거운 슬픔이 거리 곳곳 백만의 불꽃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권은 이해할 수 없는 국정운영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무너뜨리고 헬조선이라는 수치스러운 자괴감과 함께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절망만 안겨 왔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또 "박근혜 정권은 아집과 불통의 정적으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정경유착의 거대한 부패 고리를 양산하여 온갖 특혜와 변칙으로 최순실 일파의 사욕을 채워 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뜨거운 민심을 이반하고 자기반성조차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경허히 수용하여 즉각 하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국정판단을 자초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경허히 수용하여 즉각 하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충북 관광활성화 협약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5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충북도지사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충청북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청주공항 인근 국 무비자 환승관광객 체류가능지역'에 전북이 추가된 것(2016.8.8.일자)을 계기로 전북과 충북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 등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일반주택 화재, 비중 21%... 사망자는 58%

사망자 18시~24시 집중... 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 설치 중요

전체 화재에서 일반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일반주택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소방본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발생한 5,183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21%인 1,090건이 일반 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36명 가운데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1명으로 일반 주택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에 취약함을 보였다.

주택화재의 58%는 부주의가 원인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큰 소리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으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

인 소화도로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모든 주택에 지난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선재 소방본부장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임을 인지하고,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가정의 안전을 위해 담장이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전기요금 누진구간 3단계로 12월 적용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 내달 1일부터 새 요금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현행 6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구간과 최저구간의 누진을 차이(11.7배)도 상당 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광립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어느 경우에도 12월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혹

여 12월1일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못할 경우 요금 고지는 12월1일로 소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교육용 전기요금과 관련,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똑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및 편찮은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의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한 후 새로운 요금체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1

군산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순회 설명회'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위기 지속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밀집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지역순회 설명회'를 군산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말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선박 등 발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기간 연장 등 정부의 합동 지원책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정부 대책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2020년까지 조선업을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육성해 조선업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다양한 대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군산지역 조선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0일부터 경남, 전남, 부산에서 차례로 진행돼 이날 전북과 울산을 끝으로 5개 권역 설명회가 종료됐다. /군산=문정근 기자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설명회

익산시, 오늘 춘포면사무소서

전북도청이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익산시가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해당 관리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6일 오후2시에 춘포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도는 익산,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자 그 지역의 유역환경조사, 오염원 현황, 비점오염 저감기술 적용사례조사, 최적관리방안 수립 등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물질인 총인(T-P)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보국 전북연구원 박사가 참여해 비점오염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수질오염원은 지속적으로 향상 발생하는 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과 오염된 빗물유출수와 같이 임의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pollu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의 종류를 토지이용 형태별로 구분하면 도시, 도로, 농업지, 산림·하천지로 나뉜다. 도로지역은 대기오염 강화물질,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농업지역은 농약, 비료, 퇴·액비, 가축분뇨, 고령지 토양원식 및 토사 등의 유출로 발생하며, 산림·하천지역은 임도, 절·성토 사면, 산불 및 벌목·간벌에 따른 토사와 잔재물 등 유출, 하천변 영농행위, 골재채취, 호안정비, 하천 둔치부 주차장 등 조성, 상류지역 개발 등에 의한 유출로 기인한다. /익산=장영희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 063-288-9700 www.jjmaeil.com